

박 대통령 “추경,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회 제출시 조속 처리 당부... “구조조정에 초점 맞춘만큼 선심성 예산요구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10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외의 경제상황이 어느때보다도 엄중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

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도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대외여건도 지난해 브렉시트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 기구와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러한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재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행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과 관련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더라도 전직이나

재취업을 통해서 걱정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일감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주시길 바란다”며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게 될 해당 지역의 경제를 보완하는 사업도 충실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 말해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제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맑은물 운영센터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서신동에 위치한 전주 시 상수도 맑은물 운영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전주시 상수도 맑은물 운영센터는 전주 지역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통수상황과 관로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66만 전주 시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시설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설비동작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 관로 파손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상황 등을 점검하며 수돗물 공급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 활동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도의회 의장단 선출 예상대로... 이번은 없었다

의장 1명 · 부의장 2명 모두 더민주 차지... 국민의당과의 협치 무시 대립구도 후유증 예고

이번은 없었다.

의장단 3곳 결과를 보면 대체로 “이번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의원들이 예상했던 후보가 됐다는 의미다.

28일 진행된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 등 총 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확정됐다.

다만, 당초 더불어민주당 당내 투표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상현 의원은 도의회 의장단 ‘교황식 선출 방식’에 따라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교황식 선출 방식은 공식 후보 없이 전체 의원을 피선거권자로 두고 각 의원들이 직접 무기명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투표 과정에서 정당 내부에서 합의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등 원 구성에 따른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도 이상현 의원은 지난 21일 치러진 당내 투표에서 17표를 얻어 10표에 그친 황현 의원을 제치고 당내 의장 후보로 확정됐었다.

하지만 이상현 의원은 결국 고배를 마셨고 당 내부에서 합의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후유증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선출 결과는 오락가락 의사결정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간담회. 사진 왼쪽부터 강영수 부의장, 황현 의장, 조병서 부의장

모두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협치를 강조하면서 경합한 제1부의장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대립 구도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교육위원장 자리가 남아 있지 만 정치적 위상이 다른 의장단을 모두

독차지 하면서 사실상 합의는 깨진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당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 기자

강영수 부의장 인터뷰

“화합과 단결 도모할 것”

“초심을 잃지 않고 도의회 위상을 높이며 동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일 제2부의장으로 선출된 강영수 부의장(전주4·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전복도와 도교육청이 잘사는 전북,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도민들의 불리증진과 감시와 견제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부가 잘 하는 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반대로 잘못된 정책집행에는 도민을 대표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물론 비전과 정책 대안을 통하여 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단체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공동된 주제라면 위원회를 떠나 연구하고 선진지 견학 등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면서 “아울러 도정 및 교육행정,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대응하며 대안을 찾는, 위원회의 활동이 돋보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광영 기자

황현 의장 인터뷰

“성숙한 의회 문화 위해 징검다리 놓겠다”

▲당선 소감은 = 도민과 동료의원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모범적이고 활기찬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복의 가치를 높이는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 우리 전북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2017년 무주세계대관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북을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 2023년 세계잡버리대회를 유치해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해 지구촌을 전북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미래 전북의 가치를 높일 이들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돼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양분된 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는데 = 지난 4.13 총선을 통해 정치지형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으로 재편됐다.

각 정당이 현안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더불어 잘사는 전북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는 같다고 본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의회인데

분열·반목 속에서는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전복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소통과 화합 속에서만 강한 의회가 만들어진다.

대화와 타협, 소통, 이해라는 합리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제10대 후반이 의회가 성숙한 의회 문화의 기반에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겠다. 양당 간의 협조를 기본으로 삼고 업무도 공유해 의회공력을 만들겠다.

소수당·무소속 의원의 작은 목소리도 수렴하는 등 소수를 배려하고 의원간 서로 존중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타 상임위원회와의 소통부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의회 홈페이지에 인트라넷을 구축해 의원 개인 동정과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한눈에 보고 서로 의견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후반이 도의회가 이제 출발을 한다.

양당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겠다.

의정활동에 대해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신광영 기자

조병서 부의장 인터뷰

“도민 어려움 해소 앞장”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8일 제1부의장으로 선출된 조병서 부의장(부안2·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는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면서 “하반기 의장단과 함께 도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이라면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고령화사회 노인층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확대와 그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는 도청 및 도교육청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쌍두마차임과 동시에 이들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중요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지역의 법률인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 등을 가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건전한 견제와 감시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무가 수행되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3인방’ 책임 떠넘기기 ‘논총’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수민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왕후현 사무총장은 28일 구속됐고, 이 과정에서 핵심 3인방인 김 의원과 왕 부총장, 박선숙 의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아 국민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의혹 당사자들이 ‘주범은 자신이 아니다’란 식으로 진술하고 있어 비난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당내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습책을 둘러싸고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에 이어 사퇴설까지 불어지고 있다.

23일 검찰에 소환된 김수민 의원의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및 TV광고 대행업체와 브랜드호텔 사이에 이뤄진 허위 계약서는 왕 부총장 주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왕 부총장이 이번 일을 관장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김 의원에게 책임자로 지목 당한 왕 부총장은 박선숙 의원에게 화살을 돌렸다. 검찰은 왕 부총장으로부터 “박 의원에게 돈 문제를 모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총장은 자신의 상관인 박 의원을 향해 책임을 전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는 사무총장인 박 의원 책임이란 것을 의미한다.

이에 검찰은 27일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실제 리베이트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지난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 회계를 책임졌던 박 의원이 전반적으로 공지에 돌린 셈이다.

박 의원은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8일 귀가하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제 이번 사건과 안철수 대표와의 연관성 문제 등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건의 화살이 김 의원에서 왕 부총장으로, 왕 부총장에서 박 의원으로, 다시 박 의원에서 안 대표에게까지 쏠리는 형국이다. 당 내부는 더욱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누구 하나 나서 “내 책임”을 강조하는 이는 없이 서로를 향해 책임자라고 폭탄 돌리듯 지목하다보니 결국 안 대표에게 불뿔이 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의혹 당사자들의 폭탄 돌리기로 인해 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새정치 이미지가 훼손돼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마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이상호 “가습기살균제 책임 외국기업 도망 못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책임질 사람이 면피성으로 도망갈 수는 없다”며 이 문제에 관련된 기업들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특히 외국계 대기업이라고 국내법을 어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름인 사람들 구속되고 외국 사람은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원내수석대표 회담에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국정조사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좋은 합의를 했다고 평가한다”며 “누구 책임이냐는 책임 논쟁 청문회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유해물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더민주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 “6월 국회가 마감하면 바로 결산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민주는 바로 상임위에서 결산을 하고 예결위를 여는 실무구시적인 7월 국회를 열려고 한다. 법에 정해진 시한에 결산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